

CONTENTS

< 요약 >

1. 도민친화적 주거환경 정책의 필요성
2.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실태
3. 주거환경 만족도 격차와 결정요인
4. 충남 주거환경 정책의 추진방향

도민의 주거환경 만족도로 본 충남의 주거환경정책 추진방향

임준홍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연구위원, jhim@eni.re.kr
홍성효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조교수, shong11@kongju.ac.kr

일자리와 경제성장 못지않게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도민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분야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함

요 약

- 최근, 주택에 대한 정부 관심은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를 포함한 주거환경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 충남도는 타 지방 광역도에 비해 주택의 물리적 지표는 우수하지만,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는 낮은 수준임
- 이에 충남도는 일자리 경제정책 못지않게 도민의 일상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일 것임
- 도내 주거환경 격차를 분석하고, 도민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분석함
 - 충남의 지역별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 격차는 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고, 도민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의료서비스**와 **공동체 의식**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충남의 의료서비스 물리적 수준은 다른 지방 광역 시도에 비해 낮아,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체계 정비와 더불어 최근 강조되고 있는 **건강도시·건강마을만들기** 정책을 적극 검토·도입하여야 할 것임
- 또한, 도민의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해 보다 체계적·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됨. 특히, **공동체 의식 향상**은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3농혁신, 지방분권 등 도정 핵심정책의 기반이 되므로, 타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기본계획수립 및 정책 사례를 참조하여 충남도에 맞는 정책·시책을 개발해야 함

도민친화적 주거환경 정책의 필요성 ◀

01

- 주택을 둘러싼 정부와 주민의 관심이 과거 주택의 양적인 문제에서 질적인 주거환경의 문제로 확산·전환되고 있음
 - 주택공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어서 주택의 양적인 공급보다 주거복지와 주거환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 2015년 6월 22일 제정·공포된 '주거기본법'과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주거복지와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마을만들기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충남도는 민선5기 도정 비전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으로 설정하여, 경제성장 못지않게 도민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산물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환경 격차는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것이 정부의 주요한 역할이기도 함
- 충남도는 민선 6기 출범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 측면 못지않게 도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임
 - 충남도는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의 하나로 3개 시범 마을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가칭)양호한 주거환경만들기 통합지침'을 만들어, 시·군에 보급할 계획임
- 본 글에서는 충남도민의 주택 및 주거환경 수준을 알아보고, 도민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충남도 주거환경 개선 정책 추진의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실태 ◀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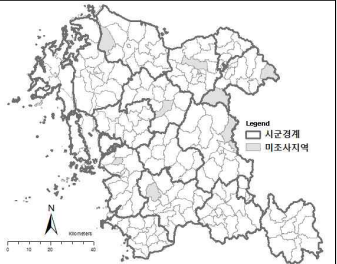
- 2014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가 국민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조사)에 나타난 전반적인 주택 만족도는 충남의 경우 86%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 이 가운데 72.5%가 '대체로 만족'에 해당하고 13.5%가 '매우 만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됨. 반면, '매우 불만족'의 비율이 0.8%로 매우 낮으나 '약간 불만족'의 비율은 13.2%로 다소 높게 나타남
 - 전국 평균만족도는 83.3%로 충남에 비해 다소 낮았으며, 광역시도 중 충남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지역은 대전(92.7%), 경남(87.8%), 충북(87.4%), 제주(87.2%), 울산(86.5%) 등으로 나타남
-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충남의 경우 만족하는 비율이 71.3%로 이는 전국의 수치인 79.9%에 비해 8.6%p 낮은 수치에 해당함
 - 충남 거주 가구의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의 비율은 28.7%에 해당하고 이 가운데 '매우 불만족'은 1.7%로 조사됨
- 다른 광역시도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전이 92.9%로 가장 높고 다음은 강원(89.8%), 경남(88.2%), 제주(86.7%), 부산(83.6%) 등으로 나타남. 반면, 충남보다 만족도가 낮은 광역시도는 경북(66.2%)밖에 없었음.
 - 이는 지방 광역도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충남도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음
- 이에 충남의 주택·주거환경 문제는 주택의 문제가 아닌 도민의 일상적인 생활환경과 직결된 주거환경의 문제로 인식되며, 주거환경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임
 - 실제, 충남 주택보급율은 107.8%(전국 101.9%), 인구1천인 당 주택수는 398호(전국 363.8호), 자가율 61.2%(전국 54.2%) 등 양적 지표는 비교적 양호함

주거환경 만족도의 격차와 결정요인 ◀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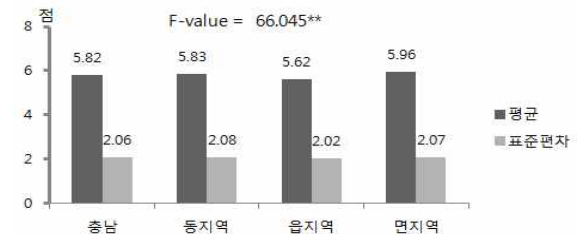
1. 지역별 주거환경 만족도 격차

- 도민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충남도가 매년 도민의 생활수준과 사회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는 '충남 사회지표조사' 자료 중 2013년 도민 가구주 1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사회지표조사 자료를 활용함

구분	도시수 (지역수)	2008년 인구	2013년 인구	충남 사회지표조사 샘플수	
충남	15(209)	1,939,892*	2,047,631	15,000명	
동지역	(46)	40.1*	44.0	29.9%	
읍지역	(139)	22.3*	24.0	29.7%	
면지역	(24)	37.6*	32.0	40.4%	

주 : *는 공주시 지역 중 세종시에 편입된 지역이 빠진 수치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1> 연구대상지의 개요와 지역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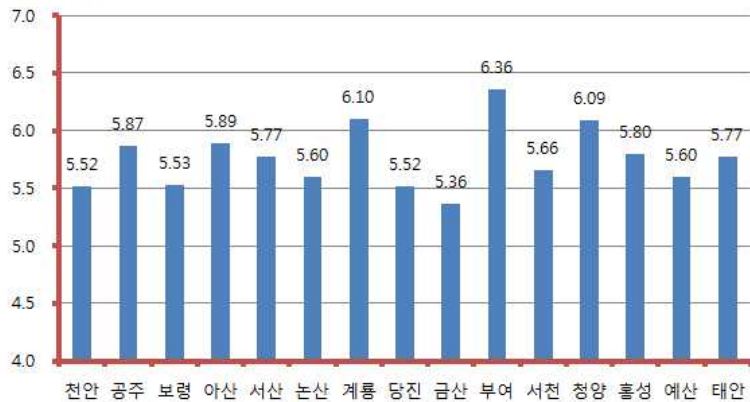
- 충남도민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82점이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도민의 만족도가 5.9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시와 농촌지역이 혼재한 읍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만족도가 5.62점으로 가장 낮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음
- 농촌(면)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고령자가 농촌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됨



<그림 2> 거주지역별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 차이

- 충남 시군별 주거환경 만족도는 부여군이 6.36점으로 가장 높으며, 금산군과 당진시, 천안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인접한 충남 북부권에 있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에서 경제적 성장 못지않게, 시민의 일상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주거환경에 보다 많은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
- 이러한 분석결과는 시군민의 주관적 주거환경 만족도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민들의 일상적인 주거생활에서 느끼는 만족도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됨

[주거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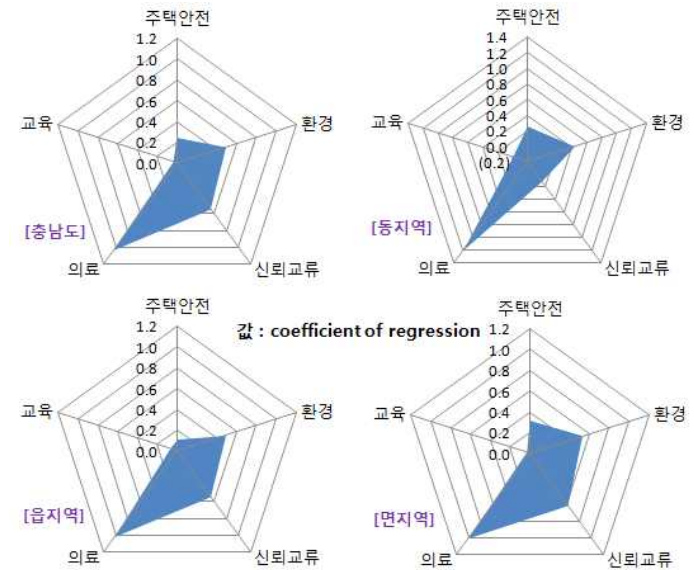
* 충청남도, 2014, 2013 충남 사회지표
〈그림 3〉 시군별 주거환경 만족도

2. 개인 및 가족 속성별 주거만족도 격차

- 개인 속성에 따라서는 남성이 5.88점으로 여성 5.76점보다 주거환경에 대해 만족도가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30대보다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남
- 가구속성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은 가운데, 함께 거주하는 가족특성에 따라서는 1세대 가구의 주거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1인 가구나 비혈연 가구가 가장 낮았음. 그리고 가족 내 아동이나 학생이 함께 생활할 경우 만족도가 낮아, 주거환경에 대해 민감하고 엄격한 기준에서 평가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이 길수록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남

3. 주거환경 만족도 결정요인

-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요인을 5가지로 구분하여 주거환경 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의료시설만족도와 이웃간의 신뢰교류, 환경(수질, 대기, 토양)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민의 건강과 관련된 의료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 4〉 주거환경 만족도 결정요인

- 이러한 경향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의료요인과 신뢰교류요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의료서비스의 강화와 거주민의 커뮤니티 강화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음

충남 주거환경 정책의 추진방향 ◀

04

- 국가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충남이지만 도민의 주거환경 만족도는 전국 타 도시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주택의 양적 관리 못지않게 주거환경의 질적인 측면에 정책을 집중해야 함
- 본 연구는 충남의 주택 및 주거환경의 문제를 주택보다는 도민들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높이는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주거환경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지역에, 어떤 주거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 정책의 힘을 모으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분석함
 - 충남의 주거환경 격차가 일자리 및 경제성장 못지않게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고, 분석하였지만 예상보다 지역 간 격차는 크지 않았음.
 -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택이나 교육요인보다는 오히려 '의료'와 '신뢰·교류' 요인들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음
- 이는 결국,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시설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공동체 의식제고(신뢰와 교류 확대)**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1. 도민 의료서비스 강화

- 충남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낮은 수준임. 이러한 낮은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도 직결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처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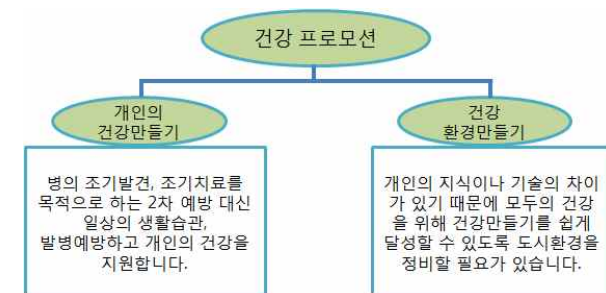
- 이러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만족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 보건의료 정책과 연계하여 충남의 보건의료정책을 선제적·전략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예를 들어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취약지역 정책과 연계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됨

〈표 1〉 충남의 의료서비스 수준

구 분	인구천명당 의사수	입원환자 지역친화도(%)	입원환자 지역환자구성비	인구백만명당 응급의료기관수
전 국	1.6	-	-	8.5
경 기	1.3	74.8	82.1	5.1
강 원	1.4	76.4	87.2	16.2
충 북	1.2	73.1	87.8	11.4
충 남	1.1	62.1	86.4	8.8
전 북	1.5	84.9	91.1	10.7
전 남	1.2	71.4	89.4	25.2
경 북	1.0	62.0	91.1	13.7
경 남	1.2	77.2	89.9	12.0
세 주	1.5	86.4	94.8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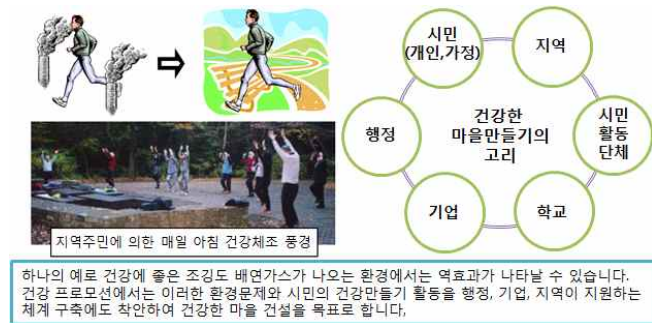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2014년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중앙응급의료센터, 2014, 2013년 응급의료 통계 참조 제작성

- 그리고 최근 선진국과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강도시만들기·건강마을만들기 정책 등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도입·발굴하여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일본의 자마시(さま市)에서는 건강한 마을만들기 정책을 통해 과거 개인의 건강을 도구나 사회적 환경차원으로 접근해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座間市, 2008, ざま健康なまちづくりプラン 참조

〈그림 5〉 일본 자마시의 건강한 마을 만들기 계획 기본방침



* 座間市, 2008, ざま健康なまちづくりプラン 참조
 〈그림 6〉자마시의 건강 환경 만들기와 건강마을 만들기 고리

2. 일상 생활환경에서의 공동체의식 강화

- 이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의 도정방향과 사회적경제 정책, 3농 혁신 등과도 매우 관련이 높음
 -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함. 서울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삶의 질이 높지 않고, OECD기준 행복지수 32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집은 지었으나 인간관계가 없는 도시공간을 양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정과 삶의 즐거움이 사라져가는 거대도시 서울’이라는 점을 반성하면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
 - 인천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전주시도 민선6기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정책인 ‘전주형 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음. 이를 위한 양대 축을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설정하여 장기적인 마스트 플랜을 수립하였음
- 주택공급에 있어서도 기존의 물리적 공급정책 뿐만 아니라 거주민의 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방식이 요구됨. 예를 들어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협동조합주택 방식의 도입 및 코하우징 개념의 주택유형 개발 등
 - 서울 강서구는 시유지를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24세대의 주택을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 이는 입주자인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건설계획부터 참여하고, 입주자들은 동일한 출자금을 모아 공동의 목적에 맞는 협동조합을 설립, 주택의 계획 수립 및 건축설계,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관리까지 운영할 계획

- 이상과 같이 충남도 역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 정책 특히,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공동체 활성화를 기본으로 하는 주거환경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임 준 홍 연구위원
 충남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041-840-1121, jhim@cni.re.kr

홍 성 효 조교수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041-850-8437, shong11@kongju.ac.kr

본 보고서는 충남연구원 전략연구과제(충남의 주거환경 격차분석과 주거환경 개선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의 일환으로 추진된 내용으로, 연구 과정에서 발표한 논문 ‘지역별 주거만족도 격차와 결정요인; 충남지역을 중심으로(한국주거환경학회, 2015년 3월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책적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생산된 것임.

◆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2014, 주거실태조사.

임준홍, 2015, 충남의 주거환경 격차분석과 주거환경 개선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진행 중),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2015.3, 지역별 주거만족도 격차와 결정요인: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제13권 제1호. pp.65-77.

임준홍, 홍성효, 2014, 주거환경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주거환경, 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제12권 제2호. pp.137-152.

중앙응급의료센터, 2014, 2013년 응급의료 통계.

충청남도, 2014, 2013년 충남 사회지표.

충청남도, 2013, 주택종합계획.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 2014년 의료자원 통계 핸드북.

座間市, 2008, ざま健康なまちづくりプラン.

www.index.go.kr(e-나라지표).

충남리포트(2014년~현재)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4-01	동아시아 철새 보전, 서천갯벌에 달렸다	정옥식	2014.01.01
2014-02	통합브랜드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충훈	2014.01.09
2014-03	충남의 협동조합, 경제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송두범	2014.01.21
2014-04	이제!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물자치 시대이다	이상진	2014.01.27
2014-05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되살리기, 상품권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민정	2014.01.28
2014-06	조류인플루엔자(AI) 관리 대책, 예방이 최우선이다!	정옥식	2014.02.11
2014-07	지원·참여형 문화소외계층 정책으로 충남형 문화복지시책을 추진하자	이인배	2014.02.13
2014-08	FT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김양중	2014.02.20
2014-09	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조영재	2014.02.25
2014-10	2014년 충남경제 전망과 시사점	김양중	2014.02.28
2014-11	다기능농업을 활성화하자	이관률·정현희	2014.03.06
2014-12	충청남도 벤처기업 현황과 발전방안	임형빈	2014.03.13
2014-13	충남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김원철	2014.03.27
2014-14	충남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최병학	2014.04.03
2014-15	충남의 행복지표와 정책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고승희	2014.04.16
2014-16	충남 논·밭의 생물상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옥식	2014.05.08
2014-17	2040년 읍면동 인구 추계로 본 충남의 정책과제	임준홍·홍성효	2014.05.15
2014-18	내포광역도시권 형성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추진 방안	오명택·김정연	2014.06.12
2014-19	충남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자동차부품산업	김양중	2014.06.19
2014-20	민선6기 충남도 및 기초자치단체 당선자 공약 분석	송두범	2014.06.24
2014-21	지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수철	2014.07.14
2014-22	지역을 위한 농업 혁신 성공 전략	이호충	2014.07.16
2014-23	대응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이정만·고승희	2014.07.17
2014-24	충남 보육정책 진단과 공공성 강화 방안	최은희	2014.07.21
2014-25	충남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김양중	2014.07.23
2014-26	충남 협동조합의 조직화와 공급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장종익	2014.07.28
2014-27	충청남도 자기주도 행정체계의 지속적 관리방안	주운현	2014.07.30
2014-28	충남 정책 키워드(3농혁신, 사회적경제)의 SNS 데이터 분석	임화진	2014.07.31
2014-29	프란치스코 교황의 충남 방문 의미와 향후 과제	유병덕·최영화	2014.08.05
2014-30	충남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김양중	2014.08.07
2014-31	내포지역의 경제성 정립과 추진과제	박철희	2014.08.11
2014-32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과 민선6기 충남의 발전 방향	김한규 외	2014.08.21
2014-33	지방 3.0 시대, 충남 재정정보공개의 의미와 과제	정창수	2014.09.11
2014-34	분권형 초광역자치의 필요성과 과제	김순은	2014.09.16
2014-35	충남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분공장 경제 탈피가 필요하다	박 경	2014.09.18
2014-36	충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김홍기	2014.09.23
2014-37	충청남도 행복키움지원단 활성화 방향과 과제	김용현	2014.09.25
2014-38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발전특금제 도입과 지역별 차등지원 방안 제언	변창흠	2014.09.30
2014-39	충청남도 주민자치를 위한 동네거버넌스 실천과 전략	안성호·곽현근	2014.10.02
2014-40	지역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현 외	2014.10.08
2014-41	충남의 산업단지, 공공디자인으로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	이충훈	2014.10.16
2014-42	충청남도와 중국 허베이성(河北省)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박경철	2014.10.17

구분	제 목	집필자	발행일
2014-43	농촌의 에너지자립, 산림바이오매스에서 찾다: 일본 산림구원대 활동	박춘섭	2014.10.30
2014-44	일본 내발적 발전의 도시형 사례와 시사점	이민정	2014.11.06
2014-45	충남 지역 현실이 반영된 교통수요분석 DB 구축과 관리 필요	김형철 · 김원철	2014.11.12
2014-46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의 이해와 도입방안	김원철 · 유준일	2014.11.20
2014-47	한·중 FTA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김양중	2014.11.26
2014-48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충남 농업의 위기와 기회	강마아	2014.11.26
2014-49	한·중 FTA에 따른 충남 수산업의 위기와 기회	김중화	2014.11.26
2014-50	한·중 FTA, 충남 지역발전 전략과 대중국 교류협력 차원으로 접근해야	박경철	2014.11.26
2014-51	서해안 시대, 충청남도 국제교류 협력 증진 방안	채진원 외	2014.12.03
2014-52	충남도와 중국 하이룽장성 교류협력전략	박인성	2014.12.04
2014-53	인권 선진으로 나가는 충남의 정책과제	성태규	2014.12.10
2014-54	충남 서북부 환경취약지역, 주민건강피해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명형남	2014.12.17
2014-55	충남 대형국책사업 발굴 및 유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충윤 · 임재영	2014.12.25
2015-01	충남 아생동식물 서식현황 및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정육식	2015.01.05
2015-02	지역단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방안	신동호	2015.01.13
2015-03	충청남도 문화예술 비전과 발전전략	박철희	2015.01.26
2015-04	충청남도 행정리 단위 마을의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 특성	최은영 외	2015.02.03
2015-05	충청남도 도서(島嶼) 특성과 발전방향	한상욱	2015.02.12
2015-06	충청남도 행정통 · 리 마을의 최근(2005~2010년) 변화와 시사점	최은영 외	2015.02.17
2015-07	2015년 충남 GRDP 전망 - GRDP 100조 시대 충남의 새로운 도약	김양중	2015.02.25
2015-08	글로벌 차원의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정준호	2015.03.05
2015-09	신규형발전을 위한 다층적 균형정책	박배균 · 김동원	2015.03.12
2015-10	사람 중심의 통합적 균형발전정책	조명래	2015.03.20
2015-11	삼교호 수계! 충남형 유역관리방안의 선제적 추진이 필요하다	김영일 외	2015.03.26
2015-12	하구의 생태적 가치!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이상진	2015.04.01
2015-13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담론과 실천 과제	강현수	2015.04.10
2015-14	충남지역 전력요금 차등화 방안 - 전력요금의 지역실태 강화 방안 -	이인희	2015.04.16
2015-15	충남의 철강산업 실태와 발전방안	백운성	2015.04.17
2015-16	충남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 평가	사공정희	2015.04.22
2015-17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업직불금 확대 필요	강마아 · 이관률	2015.04.24
2015-18	충남 “미디어유” 현황과 발전전략	권오성	2015.04.29
2015-19	충청남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과제와 전략	이상준 외	2015.05.01
2015-20	충남 도민이 꿈꾸는 행복한 성장	김양중 · 백운성	2015.05.15
2015-21	양봉산업의 의의와 발전가능성	이관률	2015.05.19
2015-22	충남 저소득층 복지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류진석	2015.05.28
2015-23	과소화 · 고령화 된 농촌마을, 유형별 재편이 필요하다	조영재	2015.06.05
2015-24	충남의 환경보건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	명형남	2015.06.12
2015-25	충남 로컬푸드 직매장의 실태 및 성공전략	김중화	2015.06.19
2015-26	지역자원시설세, 현명한 세수활용이 필요하다	이민정 · 여형범	2015.06.26
2015-27	충남의 사회적경제, 자산 활용과 시·군 중심 추진이 바람직하다	송두범 · 박춘섭	2015.07.03
2015-28	충청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지표 구축 방안	이충훈	2015.07.10
2015-29	수소연료전지산업의 최신동향과 충남의 대응 방안	이항구	2015.07.23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시 출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 본 연구보고서는 충남연구원의 자체보고서로 발간된 것이며, 충남도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